

**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15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김승원 · 송갑석  
황운하 · 홍기원 · 김주영  
민병덕 · 허종식 · 박성준  
김영주 · 김상희 · 김경만  
이수진 · 한준호 의원  
(14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, 광주, 인천, 부산,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·운영하고 있음.

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미중분쟁,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,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‘신산업 전진기지’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,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, 첨단·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

을 확대하며,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3조의4 신설, 제6조, 제7조의4, 제7조의6, 제7조의7 신설, 제9조의7, 제16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4 신설).

##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.
8. “핵심전략산업”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

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3.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
5.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13호 중 “외국인투자기업에”를 “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”로, “사항”을 “사항.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입주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.

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”을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.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7(핵심전략산업의 선정)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2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3.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지역 특화산업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7제2항 중 “외국인투자의 유치 등”을 “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국내 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”로, “감면, 의료시설”을 “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개발사업시행자,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

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입주외국인투자기업
2. 입주국내복귀기업
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4.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
다만,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3.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

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제27조”를 “제3조의4·제27조”로 한다.

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로 하고,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
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,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
5.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경제자유구역의 산·학·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7.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8. 핵심전략산업의 신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   <u>&lt;신설&gt;</u>     <u>&lt;신설&gt;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. 8. “핵심전략산업”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 <u>제3조의4(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

<p>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 ①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

13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  
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
<단서 신설>
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의 변경)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·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

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 
계획의 변경) ① -----  
-----  
-----

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·변경·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## <신 설>

② (생략)

## <신 설>

[illegible]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,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7(핵심전략산업의 선정)

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·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2. 경제자유구역별 특성·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3.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 ① (생략)

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, 사용의무기간의 준수,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,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③ (생략)
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구시설·주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

제9조의7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외국인투자기업,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-----

-----.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,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-----  
-----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

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 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<단서 신

고,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-----

-----.

1. 입주외국인투자기업

2. 입주국내복귀기업

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
4.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제2항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

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「수도

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

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-----

-----

-----<후단 삭제> 다만, 입

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

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

다.

설>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,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다만,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른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해당 국유·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2항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발  
사업시행자(제3호·제4호의 경우  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  
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)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  
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 
한다.



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 
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  
기구) ① 시·도지사는 제27조·  
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 
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  
를 설치한다. 이 경우 경제자유  
구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  
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  
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  
구를 설치한다.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국유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  
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  
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  
할 것

제27조의2(경제자유구역의 행정  
기구) ① -----제3조의  
4·제27조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4(경제자유구역청장의  
업무)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  
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  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  
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  
한 사항

2.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  
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	<p><u>3.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,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6. 경제자유구역의 산·학·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 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8. 핵심전략산업의 신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u></p>
<u>제27조의4</u> (임용권의 위임 등) (생략)	<u>제27조의5</u> (임용권의 위임 등) (현행 제27조의4와 같음)
<u>제27조의5</u> (공무원 파견기간) (생략)	<u>제27조의6</u> (공무원 파견기간) (현행 제27조의5와 같음)
<u>제27조의6</u> (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) (생략)	<u>제27조의7</u> (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) (현행 제27조의6과

같음)
-----